

화물차주의 소득안정 ·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

- 「화물운송산업 정상화방안」 발표(2.6.) 및 관련 법안의
신속한 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 중

< 보도 내용 (경향신문, 8.21) >

- ◆ 정부가 깨부순 화물기사의 삶...안전운임제 사라진 결과는 ‘벼랑 끝’
 - 안전운임제 일몰 후 운임 삭감, 원가 상승 등으로 **차주 월수입이 36% 감소**(378→241만원), **노동시간이 17%시간 증가**(265→309시간)하고, 일부 다단계 발생
 - 정부의 ‘화물운송산업 정상화방안’ 법안은 **6월 29일 국토위 상정 후 방치**

□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화물차주의 소득안정 등 처우개선과 위해 지입제 폐단 등 화물운송시장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「화물운송산업 정상화방안」을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(2.6.)하였습니다.

-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,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개정안(2.9, 김정재 의원)도 발의하였습니다.

□ 「화물운송산업 정상화방안」에는 기존 안전운임제가 지닌 문제점을 개선 하되, 화물차주가 받는 운임은 법으로 보호하는 표준운임제와,

- 화물차주들의 자비로 직접 구매한 차량 소유권의 확실한 보장, 지입차주들에게 지입료만 수취하고 일감은 제공하지 않는 운송사에게 최소한의 운송 의무 부과, 운송사의 화물차주를 상대로 한 부당금전* 요구 등 불법행위 차단 등 지입제 개혁 과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

* 영업용 번호판 사용 권리금, 위수탁계약 종료 시 차량 명의 이전비용 요구 등

□ 국토부는 법안 논의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국회에 해당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설명하고 화물연대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 중입니다.

○ 그 결과, 해당 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(6.29.)되어, 빠른 시일 내에 소위 심사 등 법안 논의가 보다 심도있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□ 정부는 앞으로 개정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법안 논의 과정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, 한편, 화물차주들이 안심하고 안정적으로 현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.

담당 부서	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	책임자	과 장	박진홍 (044-201-4505)
		담당자	사무관	정일웅 (044-201-4019)

